

4차 산업혁명 코 앞인데

IP카메라 32%가 해킹에 취약... IT보안 '걸음마'

초기 비밀번호 설정 '단순' 문제
보안취약점 제조사 통보에 그쳐
정부, 화이트 해커 키워나가야

〈IP카메라 실태조사 결과〉

구분	총 제품수	ID/PW 취약 제품수
2018년 6월		
국내제조사 (18개)	156개	48개 (30.8%)
해외제조사 (35개)	244개	78개 (32%)
합계	400개	126개 (31.5%)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와 사물인터넷(IoT) 등 기기가 발달했지만, 정작 보안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기기의 경우 홈페이지 등과 달리 특정 이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한 'IP카메라 실태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 제품에서 해킹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설정 비

밀번호가 단순한 탓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 해 말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53개 제조사, 400개 제품을 대상으로 공장 출하 시 초기에 설정된 ID 및 패스워드의 취약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제조사(18개) 제품 156개 중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제품은 48개 (30.8%)로 확인됐다. 해외제조사(35개)

제품은 244개 중 78개(32%)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조사대상인 53개 제조사 중 국내 기업인 아이디스(IDIS)가 조사 제품 27개 모두 취약제품으로 분류됐다. 외국 업체인 위드앤올은 조사대상 제품 17개 중 15개, 유니뷰는 11개 제품에서 취약점이 나타났다. 한화테크윈은 조사대상 IP카메라 106개 중 9개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IP카메라의 경우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IP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KISA는 그 결과를 업체나 제조사에게만 통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때는 업체의 동의를 받고 점검해야 해서 취약점을 오픈하는 과정이 어렵다"며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또 다시 언급됐다.

실제 KIS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oT 보안 취약점 신고 및 조치 건수는 현재(2018년 상반기 기준)까지 총 962건으로, 최근 3년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단에서는 IP카메라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라면 모두 검색이 가능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최근 KISA는 통신사와 기업, IoT 실증 사업, 보안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 정보를 검색하는 '한국형 소단'에 45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며 "한국형 소단을 45억원이나 들여 개발하는데 정부가 화이트 해커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으로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탐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소단(shodan.io)'에 국내 IoT 기기 취약점 정보가 노출되

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또 다시 언급됐다.

실제 KIS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oT 보안 취약점 신고 및 조치 건수는 현재(2018년 상반기 기준)까지 총 962건으로, 최근 3년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단에서는 IP카메라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라면 모두 검색이 가능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최근 KISA는 통신사와 기업, IoT 실증 사업, 보안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 정보를 검색하는 '한국형 소단'에 45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며 "한국형 소단을 45억원이나 들여 개발하는데 정부가 화이트 해커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정보기술(IT)·콘텐츠 일본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구직자 평균 15곳 지원... 60%는 '좌절'

사람인 295명 취업준비 전반 조사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평균 15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강 국면이 현실화 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인은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295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구직자들은 평균 15개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해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회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하루 평균 3시간을 투자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것으로는 '채용공고 검색'(33.2%)이 가장 많았고, 이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찾아보고 있다'(60.2%)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24.1%),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16.3%), '전공 공부'(6.8%), '표정, 태도, 발성 등 면접 연습'(5.1%), '합격자료 등 취업 정보 탐색'(5.1%) 순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응답자들은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시점부터' 평균 10개월 간 구직활동만 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약 11개월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구직자의 63.4%는 불합격을 맞았다. 목표 기업이 없이 '일단 되는대로 다 지원하고 있다'(61%)는 응답자들이 다수였다.

구직자의 90.8%는 최근의 취업준비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고 했고, 그 이유(복수 응답)로 '취업난으로 경쟁자가 더 많아져서'(56.7%), '채용을 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41.8%), '질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서'(33.2%), '경기가 좋지 않아서'(32.5%), '채용 전형이 더 복잡해져서'(22.8%) 등이었다.

취업 준비 시 가장 신경쓰는 것으로는 '자기소개서'(3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표정, 태도, 발성 등 면접 연습'(14.9%),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14.9%), '직무분야 인턴 등 역량강화'(12.9%), '인적성검사'(5.1%), '전공관련 학점'(3.7%), '어학점수'(3.1%), '제2외국어'(2.4%) 등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비리 퇴직공무원 재취업 이력공시"

김상조 공정위원장 업무현황 보고
윤리규정 개정·신고센터 등 개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의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한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든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훈 등 분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 및 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내달 제정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 마무리한다.

12월에는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도 확충한다.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 심사기준은 12월 고시에 반영한다.

식품·교육·주류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자산업,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 상품 분야 담합도 들여다본다.

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 법무부 등 외국 경쟁당국과 정보·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1인미디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 소송을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표시광고법, 제조물 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부동산 경매 찬바람... 9월낙찰 '역대 최저'

9·13 부동산대책 이후 경매 시장도 주춤해졌다. 지난달 법원 부동산 경매 낙찰건수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9월에 전국에서 법원경매 8341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3018건이 낙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지옥션이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월 이래 역대 3번째로 적은 진행 건수이고, 낙찰 건수로는 최저치다.

낙찰 건수는 지난 3월 3067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경매시장이 역대 최

저 진행 건수와 낙찰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대전 경매는 95건이 진행됐고 이 중 27건이 낙찰됐다. 유찰된 68건 중 36건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아파트(생활주택)로, 총 41가구 중 36가구가 경매에 나왔지만 모두 유찰됐다.

부산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9월 부산 경매는 539건 중 125건 낙찰되면서 23.2%의 낙찰률을 보였다. 역대 최저 낙찰률은 지난 6월 16.9%다.

부산에서 진행된 539건 중 232건이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으로, 부산 사상구 괴법동 소재 상가 183건이 4~8회 유찰되는

등 악성 물건의 유찰이 계속됐다.

용도별로는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이 주거시설과 토지, 공업시설보다 저조했다.

9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낙찰률은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8.1%에 그쳤다.

건수로 보면 398건이 낙찰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업무상업시설의 낙찰 건수와 낙찰률의 하락을 보면 주거시설에 집중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업무상업시설까지 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악성 물건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도 저조한 낙찰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